

낳을지 키울지부터 주거·양육비 어떻게... 한국에선 “상담할 곳 어디 없나요”

권모(24)씨는 2019년 남편과 이혼하고 당장 갈 곳이 없어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지인 집에서 신세를 졌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 당장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생계를 충당해야 했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 동주민센터에 여러 번 찾아가지만 직원도 관련 제도를 잘 몰라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결국 권씨 스스로 온라인 카페에서 정보를 찾아 한부모수당,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을 신청해 받을 수 있었다.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포기하고픈 순간’에 가장 쉽게 맞닥뜨리는 계층이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이다.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려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이들을 중심으로 촘촘한 지원 제도를 설계해야 할 데지만, 한국은 아직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출생 미신고 아동과 영아 살해유기 사건은 이런 정책적 관심 부재에서 기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아이를 낳아야 할지, 낳는다면 직접 키우야 할지를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 속고를 거듭해야 할 위기의 초입 단계부터 우리나라 임신부는 난관에 봉착한다. 공적 상담기관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가족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대면 상담이 가능한 가족센터 등을 두고 있다지만, 두 조직 모두 위기

사라진 아이들 2123

(2) 산모만의 책임 아니다

한부모수당·아동수당·생계급여... 양육자 사례·지역 따라 천차만별 주민센터 직원들도 제도 잘 몰라 ‘포기의 순간’ 붙잡아 주지 못해

정부 가족전화·가족센터 있지만 제도 안내 수준에 전문성 떨어져 ‘위기임산부 상황 맞춰 제도 연결 모든 지역에 기관·인력 준비돼야’

산부 지원이라는 측면에선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 가족전화 상담은 상담 기 능 없이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정도다. 그나마 심층 상담이 가능한 가족센터가 전국에 243개 설치돼 있지만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 임신·출산에 특화돼 있지 않다. 최형숙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후회를 최소화할 결정을 내리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심했다면 정부 지원을 받는 일의 어려움을 체감할 차례다.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 정보를

찾는 것부터 어렵기 때문이다. 양육자와 아동의 연령, 경제적 상황, 지역 등에 따라 지원 내용 및 액수가 천차만별이다. 지원 방법도 다르다. 대체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나 가족센터, 시군구청 등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도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말부터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를 망라한 종합안내서를 배포하고 있고 정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임산부들이 그런 안내서를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권씨는 “이혼 당시엔 뭔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복지로를 알게 됐는데 신청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웠다”며 “주민센터에 가면 다른 민원인도 많아 한부모라고 밝히기가 위축되는데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특화된 시설이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원 수준이 충분치 않은 점도 문제다. 위기임산부나 한부모에 특화된 제도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정도가 전부고, 나머지는 기존 복지제도 가운데 지원 조건이 맞아야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지원은 대부분 시설 입소나 공동주거 형태다. 아이와 독립적 공간에서 거주하려면 운이 따라줘야 한다.

예컨대 1세 아동을 양육하는 20대 여성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로 월 10만 원의

한국·독일 위기임산부 등 지원 제도 비교

| 한국 | 독일 |
|--|--|
| -의료비 한정 국민행복카드 100만 원(공통) -상담 가능한 가족센터 243개 운영(공통) | 임신 -상담권 법적 보장 및 1600개 상담센터 운영(공통) -기밀 출생 활용(위기 임산부 특화) |
| -국민행복카드 200만 원(공통) | 출생 -산후 조리사 최대 1년 지원(위기 임산부 특화) -아동 전문 간호사 등의 가족 방문(위기 임산부 특화) |
|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한부모 특화, 저소득 한정) -아동수당 월 10만 원(공통) -부모급여 보육료 지원(가정양육수당 지원 택1)(공통) | 양육 -양육비 국가 선지급(한부모 특화) -부모 수당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공통) -최대 3주 부모 병가(공통) |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한부모에 특화된 지원책 외에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 월 10만 원, 월 17만 원꼴인 국민행복카드(연 200만 원), 부모급여 35만 원을 포함하면 일시적으로 92만 원가량 지원을 받는다. 의료비 주거 지원 등이 별개로 있지만, 2인 가구 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긴급복지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돼야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은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항목이 거의 없고, 전세임대주택이나 긴급복지지원 등도 원래 있던 제도에 위기임산부가 포함되도록 짜 맞추는 것”이라며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게 오래 걸린다면 기존 제도라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각각 흩어져있는 제도를 사례자에 적합하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

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월스트류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 복지학과 교수는 “지원 기관들도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면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등 지원책 사이에 연계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상담뿐만 아니라 사례 관리를 통해 제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와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담을 통해 두려움을 해소해 주고 양육이 어렵다면 입양 등을, 양육이 가능하다면 양육 방법을 안내해 줘야 한다”며 “임신 초기부터 출산, 양육까지 모든 단계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으며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모든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슬 기자



글 쓰는 순서

- <1> 이름도 없이 떠난 영아들
- <2> 산모만의 책임이 아니다
- <3> 놓치는 아이들 없으려면

독일 채팅 상담 직접해보니... 신원 정보 일체 묻지 않고 45분간 ‘비밀 출생’ 정보 제공

1면 ‘독일식 토탈 케어’에서 계속

‘여성이나 부모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비밀 출생을 하기로 결정한다→ 여성이나 부모의 신원은 익명의 코드로 전환돼 상담사 이외엔 그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의료·재정·심리적 지원을 하는데, 보호자가 없는 여성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세밀하다→출생 후 아이는 입양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질 때까지 정부기관인 청소년복지청이 책임진다. 출생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어머니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제도 이용이 어렵지는 않을까. 한국

임신 관련 상담 법적 권리로 보장 국가 전역에 센터 1600개 운영 산후 도우미 최대 1년 무료 이용 ‘부모 휴가’ 육아 노동 휴식 보장

일보는 관련 채팅 서비스에 접속해 확인해봤다. 익명의 상담사는 45분 동안 기자의 신원 유추가 가능한 어떤 정보도 묻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비밀 출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 이후 베를린의 지역 상담사와 연결해줬다. 비밀 출생은 프랑스 등에서도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독일에선 ‘아이가 자

신의 뿌리를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이는 16세가 되면 어머니 부모의 신원 및 출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어머니 부모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개개인의 사정을 살펴본 뒤 정보 공개 여부를 최종 판결한다. 가족부 대변인은 한국일보에 “2023년 6월까지 1,095명이 비밀 출생을 택했다”며 “이는 아이를 살리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지원 체계를 이용할 수 없는 부모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가 태어난 뒤 닥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여러 점

으로 마련돼 있다. 출생 직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가족 조산사 제도’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산 후 도우미와 비슷하지만, 한국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5~25일만 무료로 이용 가능한 반면 독일에서는 산모 및 가족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원하는 기간 동안 아동 전문 간호사, 지자체 관계자 등이 가정방문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

육아휴직 등으로 수입이 감소한 부모를 위한 수당도 지급된다. 소득이 적을 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는 구조이며, 수급액을 줄이는 대신 수급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각자 상황에 따라 설계를 달리 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제도도 도모한다. 정부는 남성인 경우가 많은 한쪽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불 한 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모로부터 추징하는 식이다. 자녀연령에 따라 월 187~338유로(26만8,000~48만4,566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아이아빠가 누군지 몰라도 선지급할 정도로 지원 범위가 포괄적이다. ‘추징’이 아닌 ‘양육예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독일은 부모가 육아 노동에서 잠시

벗어날 권리로 법적으로 보장한다. 일명 ‘부모 휴가’다. 육아로 인한 신체적 통증, 수면 장애, 파트너와의 갈등 등에서 고통 받는 여성과 부모들은 ‘엄마 회복 재단’에 등록된 1,000개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진단 이후 부모는 병원 치료는 물론, 요가, 스파 등 시설에서 최대 3주간 머무르며 심신을 회복할 수 있다. 아이를 대동할 수도, 혼자 이용할 수도 있다. 치료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한다. 2019년 4만7,000명의 엄마, 2,100명의 아빠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부모 안정’이 ‘아이안정’과 직결된다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제도다.






NEXT LEVEL SPORTS

실감형 스포츠 체험관

스포츠 경험의 넥스트 레벨!

VR, AR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여 올림픽 종목인 클라이밍, 브레이킹, 스케이트보드를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스포츠 체험관입니다.

사전 홈페이지 예약
(<http://nextlevel.sports.or.kr>)

인스타그램 사진 둘러보기
(<https://www.instagram.com/sportsforall2023/>)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